

맞오른 불교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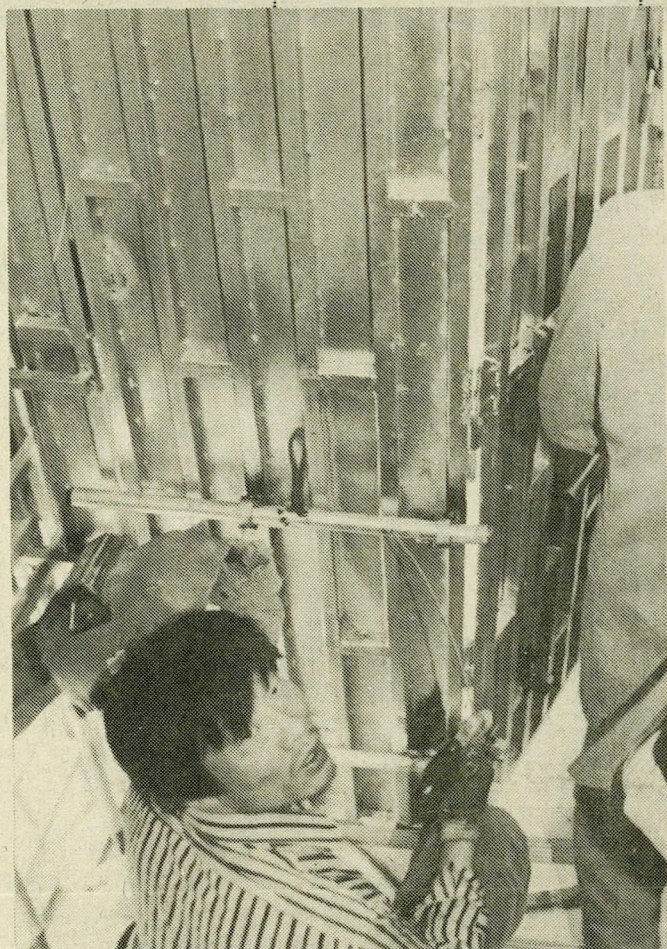
조계종 '묵은 때' 긴급점검

③

흔히 종교계 특히 불교계 내부의 돈호름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은 우선 "드러나지 않아서"였다. 즉 궁금중에 그쳤다. 조계종 사태는 이 단순한 궁금중을 심각한 문제로 끌어올린 계기를 제공했다.

현재 사찰로 유입되는 돈은 크게 △시중돈 △정부 지정한 관광사찰의 입장료 △사찰재산을 임대해 얻는 수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9월 국회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관광사찰 관입료는 92년과 93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모두 2백54억원. 이 중 30%를 문화재관리국이 활용하고, 70%가 사찰에 그대로 건네진다. 모두 59개 사찰이 이 기간에 적게는 3백25만원(전남 곡성 도립사)부터 많게는 27억6천만원(경주 불국사)까지 평균 3억원을 가졌다. 임대수입은 전통사찰만이 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에 보고한다. 전통사찰은 모두 8백50곳, 이 중 6백98곳이 조계종에 속한다.

하지만 자기가 거쳐하거나 다니는 절의 시중돈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 아는 이가 승려·신도 통틀어 얼마나 있을까. 주지만이 알 수 있다. 그의 수중에 있기



"꼭꼭 잠가라"

승려대회를 하루 앞둔 9일 총무원쪽이 대회장인 서울 종로 조계사 안 불교회관 각종 계단에 인부들을 동원해 철문을 설치하고 있다. 임완호 기자

주지만 아는 '잿밥'

영험한 기도처엔 수북...일부 수십억설 불경번역·교육 투자 쥐꼬리...판데로 새

때문이다. 조계종의 경우 재무국장 등 재정을 관리하는 이를 따로 둔 곳은 해인사·불국사·동화사 등 24개 본사를 빼고는 몇 되지 않는다. 물론 몇백만원 내지 몇천만원에 불과한 절이 상당수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움직이는 인파규모로 보아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 쌓여라 짐작되는 곳들이다. 독특한 내력을 가져 영험하다는 기도처들이 첫손에 꼽히는데, 관악산 연주암, 강화도 보문사, 남해 보리암, 오대산 적멸보궁 등이 그들이다. 특히 대구 동화사가 관할하는 갯바위절은 "모르긴 몰라도 수십억원"이라는 설까지 회자된다.

물론 어디에 썼는지도 공개된 적이 없다. 조계종의 경우 지난해 7월 충격적 기록을 남겼다. 원로회의와 본사주지회의를 거쳐 '재정공개'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강남포교원(서울 서초동), 금강정사(경기 광명) 등 이제껏 그러했던 몇몇 도시형 포교당과, 서울 경국사 등 극소수를 빼고는

아직 모두 복지부동이다. 주지직을 거래한다느니, 상납한다느니 툭하면 불거지는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는 게 이 때문이다. 돈호름이 투명했다면 폭력배 동원도 반복되지 않았을 게고, 정치권력과의 유착도 무망했으리라는 게 중평이다. 심지어 돈과 쓰임새가 낱알이 공개돼도 주지자리 다툼이 있을까 단정하는 이들도 있다.

돈호름이 베일에 싸였으니, 재정운영도 되통스럽기 마련이다. 수십억대를 쏟아 불상이 건조되는 한편으로, 역대가 소요될 폭력배 동원이 이뤄지고, 또 불경을 한글로 고치는 작업은 몇천만원 예산이 없어 십수년째 제자리에서 맴도는 기현상이 병존했다.

이런 불균형은 교육에서도 드러난다. 행자시절, 지방의 강원, 서울의 중앙승가대학교와 선원 등 갖가지 교육기관이 서로 체계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자교육을 안 받아도 그만, 강원을 안 거쳐도 그만, 선방에 발을 들이지 않아도 그만이다. 요컨대 통일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자격시비가 불거지고, 같은 조계종단 승려 사이에 불화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최근 사태 와중에는 심지어 '염불도 못 외는' 승려가 있다는 비아냥까지 새삼 나돌았다. 행자로 등록한 지 6개월이면 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걱정이 부쩍 호응을 얻고 있으며, 승려로 받아들인 뒤 교육할 게 아니라 교육을 마친 이에게만 승려 자격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세간 일부의 오해처럼 출가가 '도피'는 아니다. 많은 스님들이 "깨달음에 이르려고 세간 미련을 떨치고 나섰다"고 말한다. 불가에서는 원력이라 말한다. 방법은 참선일 수도, 책일 수도 있다. 공부라는 원력을 이루기 위해 불교가 인력과 재력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잿밥에 눈 어두워 염불을 그르침'이 옛말만은 아니다. 개혁의 종착지도 이것이라 꼽힌다.

정인식 기자